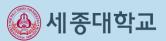
한국현대사의 이해

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

15주차. 자본주의의 발전(2) 1강. 박정희 정부(1)





- 1.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전략은 무엇인가?
- 2. 한일 국교정상화의 의미는 무엇인가?





- 1. 박정희 정부의 자본주의 발전, 한일 국교정상화를 이해할 수 있다.
- 2. 그 발전 및 국교정상화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 그것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제1강 박정희 정부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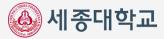




생각해 볼 문제



- 경제발전전략이란?
- 나는 지금까지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전략, 한일국교정상화를 어떻게 평가했는가?



- ☑ 외향적 발전전략(outward-looking development strategy)
 - ➡ 해외시장 개척
 - **→** 수출증대
 - ➡ 외국의 차관·자본 도입
 - ➡ 경제발전, 산업자본 축적



[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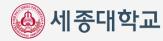
- ☑ 독자적 경제(self-reliant economy)
 - → 수입대체사업 육성
 - ➡ 외국자본의 유입 반대
 - ➡ 대외 의존도 감소
- ✓ 지표
 - ➡ 개발연대(1965-1979)
 - ➡ 연 10%의 고도 경제성장
 - ➡ 1인당 국민총생산(GNP): 87달러(1962) → 1,674달러(1979)
 - → 수출: 5,500만 달러(1962) → 150억 달러(1979)



- ☑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
 - → 3차례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(1962~76)
 - ➡ 자본·기술 부족 → 특정산업의 선택·집중
 - → 기계공업진흥법, 조선공업진흥법, 전자공업진흥법,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, 석유화학공업육성법, 철강공업육성법
 - ➡ 희소한 투자 재원의 배분, 우대 금융, 조세감면
 - → 기업의 대형화(대기업/재벌) 가능



- 1950년대의 재벌 형성의 물적 기초
 - 미군정기와 정부수립 후의 귀속재산의 특혜적 불하
 - 원조 물자의 특권적 배정
 - 은행의 특혜적 융자는 1950년대 재벌 형성의 물적 기초로 작용
 - 특히, 삼백산업(제분·제당·면방공업)은 부의 축적 계기
- 1960년대 초
 - 정치적 혼란기에 다소간의 재벌 부침
 - 이 시기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포착한 신규 기업이 아닌, 10년 정도의 기업경영 실적을 가진 기업인



- 1960년대 중반 이후
 - 박정희 정부는 수출 주도적 경제성장을 목표로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
 - 정부의 지원은 주로 기업경영 경험이 있는 소수의 기업인에게 집중 경향
 - 대부분의 10대 재벌기업들은 기업 확대의 초석이 될 경공업중심의 신흥 산업 소유
 - 저임 노동력과 정부의 지원 이용

- 1970년대
 - 1960년대에 기초를 다진 주요 재벌기업들이 본격적인 확대
 - 정부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·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
 -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추진, 종합무역상사 육성은 1960년대에 성장한 기업 대상
 - 중화학공업이 대규모 산업, 해외시장에서 최소한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대기업 선정
 - 재벌은 중화학공업 등의 기간산업 장악, 다수의 대기업 운영
 - 실질적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 확립

- 1970년대 말
 - 중화학공업 투자의 과잉 중복, 세계적 불황에 따른 수출 감소, 제2차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
 -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1980년대 이후 그 지배구조 강화
- 1979~1980년
 - 주요 중화학공업 부문의 통폐합으로 경쟁력 회복
 - 재벌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실기업 정리
 - 자본의 재편을 통해 중화학공업 부문에서의 지배력 공고화

- 1980년대
 -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 더욱 강화
 - 특히, 정부가 추진한 개방체제로의 이행과 민간주도 경제가 이를 촉진
 - 광공업 분야에서 중소기업과의 하도급 계열화 관계의 확대, 금융부문 진출 확대
 - 은행주식 소유, 금융 여신에 있어 유리한 지위

- 1997년 외환위기
 - 정부의 재벌 개혁정책
 -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(연결재무제표의 작성, 사외 이사의 선임)
 - 계열 기업 간의 상호채무보증의 폐지
 - 기업의 재무구조 개혁(부채비율의 감축)
 - 주력사업에의 업종 정리(사업교환)
 - 경영자의 책임 강화
- 2000년대
 - 삼성, LG, 현대, SK 등의 글로벌 기업 출현
 - 재정비, 경영권 승계 과정



- 개벌의 긍정적인 영향
 -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여 잠재적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함
 - 외부충격을 완충시켜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하는데 기여
 - 외환위기 이후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의 출현에 기여

- 개벌의 부정적인 영향
 -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업 진출, 중소기업의 자생력 및 성장 억제
 - 부품 및 소재산업의 발전 취약, 뿌리가 약한 기형적인 경제구조 형성
 - 독과점적 지위 형성
 - 묵시적 담합 유지하여 생산의 효율화 저해
 - 소유·지배구조에 따른 경영의 비효율성
 - 재벌 총수가 전체 계열사의 핵심 경영에 직접 참여, 상명하달식의 기업조직 유지

- ☑ 경제·기업발전에 필수적 자원: 자본, 기술
- ☑ 자본 조달
 - ➡ 정부 저축, 민간저축 기능 증대
- ☑ 국세청 신설
 - ➡ 세원 확대, 세무 감사, 세무공무원 감독 기능강화
 - ➡ 부정, 탈세, 누세 방지



- ☑ 조세 부담율(1960~65년 평균 8% → 1969~71년 14.5%)
- ☑ 1965년 만기정기예금 금리 29.4% 인상
- ☑ GNP 대비 은행의 예금유치 총액 (1964년 6% → 29%)



☑ 한일협정(1965)

한일기본조약

- 1965년 6월 22일 한국의 외무장관 이동원,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와 일본 외무장관 시이나 에쓰사부로,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 사이에 조인된 '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'
- 조약의 교섭(한일회담)은 14년(1951~1965) 동안 지속
- 최종단계에서 두 나라에서 모두 야당과 학생 등의 강력한 반대운동 전개
- 청구권문제, 어업문제, 문화재반환문제 등에서 한국 측의 지나친 양보가 논란이 되었음

☑ 대일청구권 자금 도입

대일청구권 문제

- 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일본의 배상문제
- 청구권 문제
 - 1909~45년까지 조선은행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된 지금(地金) 249톤, 지은(地銀) 67톤
 - 조선총독부가 한국국민에게 반제해야 될 각종 체신국의 저금·보험금·연금
 - 일본인이 한국의 각 은행으로부터 인출해간 저축 금액
 - 재한 금융기관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대체 또는 송금된 금품, 한국에 본사 및 주사무소가 있는 한국 법인의 재일 재산
 - 징병·징용을 당한 한국인의 급료·수당과 보상금
 - 종전 당시 한국 법인이나 자연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 법인의 주식, 각종 유가증권 및 은행권



☑ 대일청구권 자금 도입

대일청구권 문제

- 이는 법적 근거를 가진 최소한의 청구내역
- 일제 치하에서 한국민이 당한 정신적 ·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미포함
- 대일청구권문제는 한일회담의 주요의제
- 한국 측의 8억 달러와 일본 측의 최고액 7천만 달러의 차이
- 62년 11월 12일 김종필 특사와 오히라 마사요시(大平正芳) 일본외상의 비밀회담에서 합의

- ☑ 무상 3억 달러, 유상 재정 차관 2억 달러, 상업차관 3억 달러
- ☑ 포항제철 건설, 원자재 구입(2억5000만 달러)
- ☑ 경부고속도로, 소양강댐 건설, 철도시설 개량, 농림수산업·광공업육성



학습정리

- 한 국가, 특히 후진국의 경제개발전략에는 외향적 발전전략, 독자적 경제가 있다.
-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.